

기업 대출 [경제종합]
자금경색 불동 될라

예금 상담 기업·은행들
도산 공포 확산

0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99.04 (+27.25)	코스닥 713.33 (+12.85)
금리 (미국 3년) 4.156 (-0.030)	환율 (원-달러) 1384.90 (-16.30)(8일)

너도나도 “빠른배송” 출혈 경쟁에 적자 늘

고부가 ‘시스템 반도체’ 리더십 확보 시급

엔데믹시대, 유통산업 어디로

〈上〉 차별화 없는 e커머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일상이 유통산업의 질서도 바꿔냈다. 감염병을 피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비대면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너도나도 e커머스로 역량이 집중됐다. 시장이 포화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지자 하루도 걸리지 않은 시간에 배송을 보장하는 직매입형 e커머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 다음은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차별화 방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성공적인 차별화 모델이 등장하면 여기에 시장 플레이어들이 모두 뛰어들면서 차별화가 무색해졌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급변하는 유통산업의 현주소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엔데믹(풍토화)을 맞은 현재, e커머스 기업들은 새로운 차별화 서비스 마련이 시급해졌지만 마땅한 대안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KT웹모바일

심각한 수준의 적자가 계속 되는 데에는 차별화와 쇼핑 선순환 실현의 어려움에서 온다.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대부분의 기업이 적게는 몇백억원, 많게는 천억원대의 마케팅·홍보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e커머스 포화 직매입형 전환에 물류센터 건립 중 네이버쇼핑 제외 대부분 적자상태 11번가·위메프 등 새로운 모델 시도 엔데믹 시대 새로운 경쟁력 찾아야

엔데믹(풍토화)를 맞아 또 다시 변하는 유통 질서 속에 e커머스 기업들의 행보가 위태롭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쇼핑이 국내 소매유통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48.6%로, 매출 증가율은 10.3%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매출이 16.1% 늘었는데 팬데믹 이후 e커머스 시장은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e커머스 업계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e커머스 기업 중 흑자를 낸 곳은 극히 적다. 외형 성장을 이루고도 거액의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다.

올해 IPO(기업공개)를 예정했던 SS G닷컴이 1079억원,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2177억원, 내년도 IPO를 준비하는 11번가가 6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재 업계 최대 거래액과 회원을 확보한 쿠팡도 매출 20조3634억원을 내고도 1조 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내는데 성공한 곳은 네이버쇼핑으로,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16%대에 이

판다. 팬데믹 기간 중 차별화 성공모델로 떠오른 직매입형 e커머스는 아직 물류센터 건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의 시기는 한참 뒤일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쇼핑이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네이버가 직매입형 물류센터 건립에 나서지 않은 대신 검색, 쇼핑, 간편결제에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직매입형 e커머스로의 전환이 어려운 다수의 기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화를 시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1번가의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론칭을 통한 해외직구 시장 공략이다. 11번가는 해외직구에 승부수를 걸고 지난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열고 유료 멤버십과 프로모션에 해외직구 혜택을 쏟아내는 중이다.

위메프는 빅데이터를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입점 기업 유치를 통한 거래액 상승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휴쇼핑몰 수수료 0%, 애플리케이션 접근 지원, D2C 서비스 무료 제공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냈다. 티몬은 라이브커머스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콘텐츠 커머스’를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성공 여부다. 현재 11번가는 원·달러 환율 1400원대인 상황에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외에 라이브커머스 등 기타 서비스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4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반도체를 지켜라

〈下〉 허울뿐인 강국

‘칩4’ 동맹 중 종합 경쟁력 최하위권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등 육성 필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는 유독 경쟁력이 낮은 분야로 꼽힌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4500억달러 수준, 메모리(1700억달러)보다 3배 가까이 크지만, 국내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다. K 반도체 산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이 최근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 종합 경쟁력을 6개국 중 5번째로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종합 경쟁력에 71점을 줬다. 미국(96)과 대만(79)은 물론, 일본(78), 중국(74)보다도 낮은 점수다. 아래로는 EU(66)가 있었다. ‘칩4’ 동맹 중에서는 최하위인 셈이다.

문제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87점으로 미국(91)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시스템반도체가 63점으로 EU(74점)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020년 조사에서 3위, 5위였던 대만과 중국이 이번에는 2위와 4위로 한계단씩 올라선 것. 대만과 중국은 각각 TSMC와 SMIC, 그리고 글로벌 수준 팹리스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장 칩당 가격만 봐도 최선단 공정 기준 D램은 8개 묶음이 몇천원, 시스템 반도체는 수십만원을 호가한다. 웨이퍼당 생산 개수와 공정 난이도, 개발 비용 등을 감안해도 시스템 반도체 수익성이 훨씬 높다는 업계 중론이다.

영업이익률만 봐도 차이는 분명하다. 3분기를 기준으로 TSMC는 5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30% 후반대에 머물렀다. SK하이닉스는 30% 초반이다. 팹리스인 엔비디아나 AMD의 경우는 50%를 넘어선다.

차량용 반도체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메트로경제 ‘2022 반도체 포럼’ 개최
오늘 14:00~17:00, 서울 여의도 KRX거래소 컨퍼런스홀 (관련기사 L8)



尹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손진영 기자 son@

“내년부터 성장률 추락... 2050년 0.5% 전망”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생산인구 감소에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하락시 성장 0%로 멈춰

오는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로 떨어질 것인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뒷받쳐 주지 않을 경우에는 0%로 아예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

DI)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등 단기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 등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8일 발표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2023년 2%대 초반 수준에서 2050년 0.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50년 1.3%로 추산됐다. 장기경제성장률은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

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자본공급 증가세 축소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부터는 생산성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데 따른 노동공급 감소라는 게 KDI 분석이다.

<4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허은아 “디지털 유산 승계 조속 입법화”
▲ 윤회근 경찰청장, 사퇴 요구 일축 “어려운 길 선택하겠다” /사진 뉴스스

▲ 외교부 “이태원 외국인 사망자 22명 운구 예정... 18명 지원금 지급”
▲ 국무조정실장, 이태원과 강남역 인파 비교에 부적절 논란



▲ 안보실장 “안보 현실 입증, 7차 핵실험 대비... 도발엔 대가 따를 것” /사진 뉴스스
▲ 여야, 정부위도 ‘이태원 참사’ 공방... 총리 사퇴 압박도